

#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납품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길곤\*\*이보라\*\*\*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corruption intentions are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wo types of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ir associated moral costs are addressed; perception of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Using game theory, we found that these perceptions can explain the extent of moral costs and the evolutionary stability of corruption in a society.

We surveyed 267 participants of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12' and measured their experiences of corruption, perceived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expected return of corruption, and the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citizens who believe that corruption is serious show less intention to act in a corrupt way.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of prevalence of corrup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upt intentions. This implies that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citizen's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s of corruption, and also be able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 practices even if they are prevalent in society.

[Key Words: Corrupt practice, Perception, Evolutionary stable strategy]

## I. 들어가며

부패는 '사적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윤태범, 2000). 그러나

\* 본 논문은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95).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kilkon@gmail.com),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연구위원.

\*\*\* 부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jessi28@snu.ac.kr)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자칫 공직부패를 공무원 혹은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로 한정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 대부분의 부패연구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이나 부패행위 유발하는 제도, 그리고 부패행위에 따른 유인(incentive) 등을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 처방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왕수, 1998; 박재완, 1998). 하지만 부패유발자가 반드시 공무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부패 유발자는 시민이다. 시민과 공무원 간의 불법적 거래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패의 경우 그 주체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유발자가 시민인 경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백완기 외(2000)의 사례연구에서는 부패유발자가 시민인 경우(16건)가 공무원인 경우(5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뢰죄의 처벌건수를 비교하더라도 2010년의 경우 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58명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중재인은 6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유인설계도 주로 적발확률과 처벌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흔히 ‘낮은 방식(low-road approach)’으로 불리는 이 접근방법은(OECD, 1996) 부패행위를 부패에 따른 비용이 편익에 비해 적음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의 결과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부패한 공직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가 생활의 방식(a way of life)이 된 사회에서는 적발확률이나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저항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부패유발자가 시민인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측면 때문이다. 사회에서 부패를 용인하는 인식이 만연하는 경우 시민은 부패행위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고, 이러한 행위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일상화된 생활양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손승영, 1998). 이렇게 관행화된 부패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소수의 대형비리(grand corruption)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총비용 관점에서 보면 시민이 저지르는 관행화된 다수의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가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관행화된 부패는 대형비리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 이론<sup>1)</sup>처럼(Kelling and Wilson, 1982) 시민이 저지르는 사소한 부패들은 대형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관행화된 부패에 관대한 시민은 대형비리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부패에 관대한 시민은 그 자신이 대형부패를 저지를 의향도 클 가능성이 있다.<sup>2)</sup>

1)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시작해서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행화된 부패의 원인에 대해, 인식과 행위(의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 행위에 대한 의향(intention)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부패의향은 잠재적인 부패유발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나 한국행정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부패인식과 청렴도 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패수준 인식이 실제 부패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인식이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도덕적 비용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합리적 개인이 부패로 인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비용을 고려할 가능성은 높다. 이 도덕적 비용은 개인의 윤리의식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이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 문화와 관습에 따라 발생하는 부패는 사회의 암묵적인 승인으로 부패행위의 도덕적 비용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리적 개인의 관점 및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부패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부패 관행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인식 개선을 통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합리적 기대효용이론 관점에서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적발확률이나 처벌수준과 같은 변수보다 도덕적 만족도나 도덕적 비용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sup>3)</sup>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는 관행화된 부패를 선택하는 것이 진화안정 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그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패의 종류는 낮은 수준, 작은 규모의 부패라는 의미의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를 말하며,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종류로 생계형 부패, 소규모 부패라고도 한다. 사소한 부패는 예컨대 민원인이 관료를 대상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거나,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반대의 뜻으로 쓰이는 대형부패(grand corruption)는 커다란 부패, 권력형 부패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에 윤태범(2000)은 소규모의 사소한 부패에 대한 관용의 대응은 결국 보다 위협적이고 대규모적인 부패(grand corruption)에 대하여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합리적 기대효용이론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제적 편익·비용과 더불어 도덕적 편익·비용의 함수라고 알려져 있다.(Klitgaard, 1988) 그러나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 보다 도덕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Dan Ariely는 그의 저서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에서 사소한 부정행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비용과 편익보다 도덕적 요인에 좌우되는 인간의 행태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 II. 이론적 관점에서 본 시민의 관행화된 부패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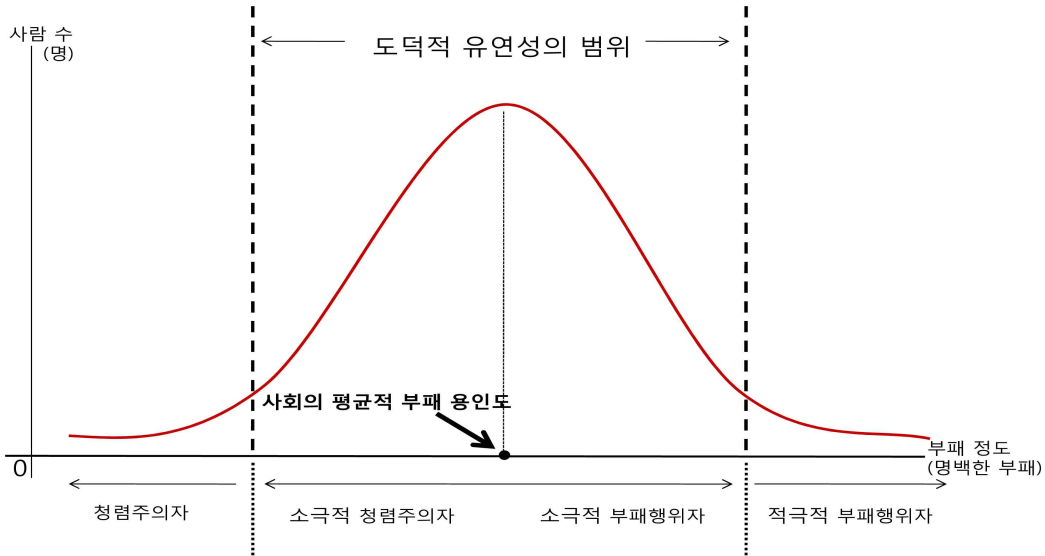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패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그 분석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패원인은 개인 혹은 직업윤리에서부터 제도와 구조, 체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Heidenheimer et al., 1989; Lambsdorff, 2006; Rose-Ackerman, 1999; 윤태범, 2000).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부패를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만일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부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윤리의식에서만 찾게 된다면 부패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즉 부패행위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부패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을 반부패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관점은 그간 수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1>은 부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사람들의 분포를 예시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청렴주의자와 어떠한 제약 조건 속에서도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적극적인 부패행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평균적인 부패의 용인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극단적인 두 부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며 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중간지대에서 배회한다. 즉, 관행화된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 도덕적 유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반부패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류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전반의 부패수준(도덕성 수준)이 개선될 여지는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Ariely, 2012).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부패행위자의 수가 증가할 때 평균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부패행위자에게 영향을 받아 동태적으로는 부패행위자로 변화하게 된다면 부패가 증가하여 사회에 만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과연 부패가 진화우월전략(evolutionary dominant strategy)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부패태도 유형의 분포와 도덕적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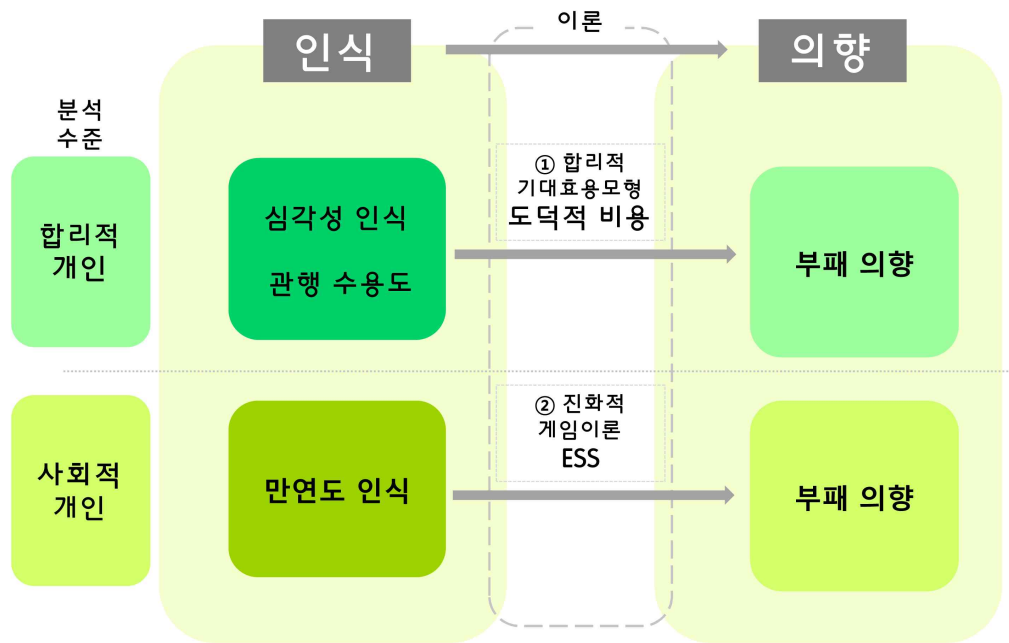


물론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사소한 부패(petty corruption)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저지르는 중대부패(grand corruption)에 비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댄 애리얼리(Dan Ariely, 2012)가 지적하듯이 사소한 부정행위(예를 들면 회사 용품을 집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촌지나 결혼식 축의금, 선물을 주는 행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관행화된 부패행위들은 그 효과가 사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공공조직의 많은 부패가 접대나 향응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부패가 관행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부패행위의 사회적 비용이 적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의 총합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중대부패보다 더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관행화된 부패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즉 각 사회마다 규범과 가치가 다양하므로, 어떤 사회에서는 부패로 간주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문화로 인식될 수 있고(김준석, 2011; 이영균, 2003), 개인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인진·조대엽(2001)은 부패행위 유발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공직부패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이나 관료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부패를 수용하고 일상화하는 관행이 더 심각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부정부패에 대해 민원인들이 갖는 관용적인 태도는 사회적 산물이고 이 태도는 실제 부패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윤인진·조대엽, 2001)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이 인지하는 비용과 편익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청렴이나 혹은 부패로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나 비용이 크다면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과 비교하면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전략적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관행화된 부패의 지속성과 부패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합리적 기대효용모형과 진화안정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 ESS)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론을 이론적 틀로 제시하였다. 전자의 합리적 기대효용관점에서 도덕적 비용·만족도 요인과 연관된 부패인식을 설명하고, 진화안정전략관점을 통해 관행화된 부패가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본 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림 2> 분석의 틀



### 1. 합리적 기대효용관점에서의 도덕적 비용과 기대이익 그리고 부패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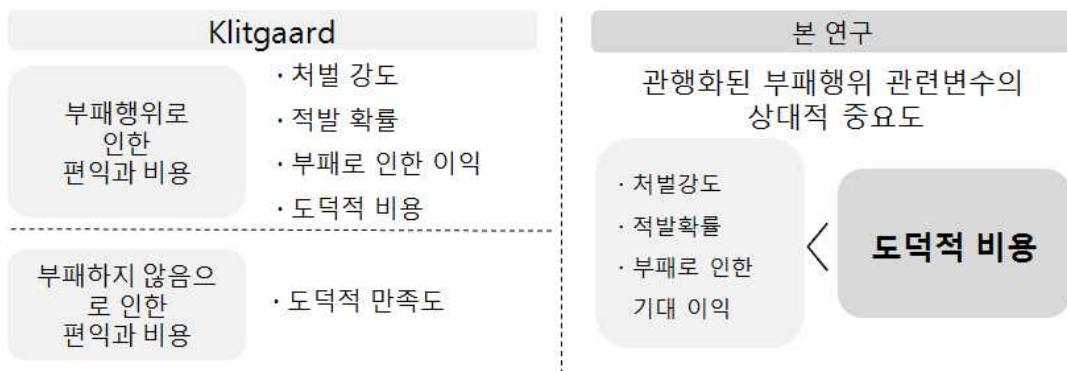
클릿가드(Klitgaard, 1988)를 위시한 합리적 기대효용모형의 지지자들은 개인이 부패행위

에서 얻을 수 있는 총효용과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음으로 인한 총효용을 비교하여 기대되는 이득이 기대되는 손실을 초과할 때 부패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부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적발확률과 처벌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처벌 강도와 적발확률을 높여서 부패의 기대효용을 낮추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관행화된 부패는 위와 같은 적발확률과 처벌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높으므로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적발에 대한 의지가 낮고 적발 확률 또한 낮아서 부패행위자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덕적 비용은 관행화된 사소한 부패에서 더 중요하게 된다. 중대부패는 부패행위에 따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도덕적 비용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후자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관행화된 사소한 부패는 경제적 편익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덕적 비용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 도덕적 비용의 크기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 의존한다. 도덕적 기준은 개인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덕적 부담은 각자 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부패의 심각성 인식은 개인의 부패의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클릿가드(Klitgaard, 1988)의 합리적 기대효용모형에서 제시된 부패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분류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요인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부패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재분류



실증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 혹은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패의 만연도와는 다른 차원의 인식

이다. 부패가 만연한지에 대한 인식은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타인들의 부패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관찰되는지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 한다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타인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부패문제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되게 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은 부패의 심각성 인식이 높을 수 있고, 부패행위를 할 때 높은 도덕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도덕적 비용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부패를 관행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정도 즉 관행수용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동일한 부패행위를 명백한 부패 혹은 관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를 부패로 보기보다는 관행으로 보는 개인은 도덕적 기준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행위를 할 때 지불하는 도덕적 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실증연구(윤인진·조대엽, 2001; 고길곤·조수연, 2012)는 시민과 공무원 간 혹은 개인 간에 관행수용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부패의 도덕적 비용에 대한 인식, 즉 부패의 심각성 인식도와 관행수용도가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부패의향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개인의 관행수용도가 높을수록 부패의향이 높을 것이다.

## 2. 진화안정전략관점에서의 부패만연도와 부패의향

부패가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관행화된 부패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도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부패를 복수의 개인의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게임이론의 진화안정전략의 문제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진화안정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 ESS)이란, 개체군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단 그 전략을 채택하면 다른 어떠한 대체 전략도 그 전략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없는 전략을 말한다(Smith, 1982). 즉, 어떤 개체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란 개체군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Dawkins, 2012). 따라서 성공적인 전략은 개체군 내에서 그 수가 지배적(dominant)이 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주류 전략을 선택하였을 때의 기대보수가 비주류 전략을 선택할 경우의 기대보수에 비하여 항상 큰 경우 그 전략은 대부분의 구성원에 의해 채택되는 성공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어떤 전략이 성공적 전략이 되는지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이 관행화된 부패를 수용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청렴한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게임이론적 상황을 가정하자. 먼저 2인 게임에서 시



민은 부패전략 C(Corruption)와 청렴전략 I(Integrity)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Player 1 과 2는 상대방의 전략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보수에 의존하게 된다. 관행화된 부패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모두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시민 1의 보수  $u(I,I)=c$  는 모든 사람이 관행화된 부패를 저지르며 발생하는 보수  $u(C,C)=a$  보다 크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은 부패를 저지르는데 다른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나의 기대이익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u(C,I)=c > u(I,C)=d$  의 관계를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모두 관행화된 부패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부패를 행하는 나의 보수(a)와 자신만 부패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때 보수(c)의 크기를 비교하면  $u(C,I)=c > u(C,C)=a$ 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보수행렬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4)</sup>.

<표 1> 2인 게임에서의 보수행렬 (일반형)

		Player 2	
		C	I
Player 1	C	(a, a)	(c, d)
	I	(d, c)	(e, e)

단,  $e > c > a > d$

0에서 1까지 값을 갖으면서 위 보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보수행렬이 아래와 같다고 예시를 해보자. 이 경우 (C,C)전략 즉 모두 부패행위를 하거나 혹은 모두 청렴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쉬균형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는 청렴하거나 부패한 두 가지 상태중 하나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I,I) 전략이 보수가 높지만 (C,C) 전략 역시 내쉬균형이 되어 시민들이 자신의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게 된다.

<표 2> 2인 게임에서의 보수행렬 (예시)

		Player 2	
		C	I
Player 1	C	(0.2, 0.2)*	(0.4, 0)
	I	(0, 0.4)	(0.6, 0.6)*

4) 위 <표 1>의 보수행렬은 타인과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이타적 행위에 따른 기대보수가 크다는 가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사회에 따라서는 혼자만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의 보수가 모두 청렴한 경우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  $c > e > a > d$ 의 순서가 되어 보수행렬은 죄수의 딜레마 조건이 충족되어 유일한 내쉬균형은 모두 부패를 행하는 전략 (C,C)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관행화된 부패가 얼마나 사회에 만연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해보자. 여기서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시민은 타인이 청렴 전략을 쓸지 혹은 부패 전략을 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근거하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청렴 전략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부패가 사회에 만연하더라도 돌연변이처럼 청렴(I)을 선택하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으므로, 높은 보수(0.6)를 기대할 수 있는 청렴전략이 여전히 우월한 전략이 된다. 그러나 청렴전략을 쓰는 사람보다 부패전략을 쓰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은 사회라면, 청렴전략으로 인한 기대보수는 매우 낮으므로(0) 부패전략(0.2)이 우월한 전략이 된다. 이렇게 후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렴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패균형이 깨지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진화안정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기 위해 사회의 주류가 선택하는 전략이 아닌 비주류적인 전략을 선택할 확률을  $\epsilon$ 이라고 하자. 아래는 부패를 행하는 것이 주류 전략인 사회에서 부패전략의 기대보수가 항상 청렴전략의 기대보수보다 크게 되는 것을 통해 부패전략이 진화안정전략(ESS)이 됨을 증명하는 수식이다.

$C^*$  가 주류 전략일 때,

$$C^* \text{ 선택시} \rightarrow (1-\epsilon)u(C^*, C^*) + \epsilon u(C^*, I)$$

$$I \text{ 선택시} \rightarrow (1-\epsilon)u(I, C^*) + \epsilon u(I, I)$$

주류 전략  $C^*$  를 선택하였을 때의 기대보수에서 비주류 전략  $I$  를 선택하였을 때의 기대보수를 뺀 것을 식(1)이라 하자.

$$u(C^*) - u(I) = (1-\epsilon)u(C^*, C^*) + \epsilon u(C^*, I) - (1-\epsilon)u(I, C^*) - \epsilon u(I, I) \quad (1)$$

위 식(1)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식(1)>0) 시민 1은  $C^*$  를 선택하게 된다. 위 식에 보수값(payoff)을 대입하면,

$$\begin{aligned} u(C^*) - u(I) &= (1-\epsilon)a + \epsilon c - (1-\epsilon)d - \epsilon e \\ &= (1-\epsilon)(a-d) + \epsilon(c-e) \end{aligned} \quad (2)$$

사회는 주류적인 생각에 반해 비주류적 돌연변이 전략을 선택할 확률  $\epsilon$  이 매우 작다고 한다면  $\epsilon(c-e)$  항은 0에 가까우며  $a > d$  이므로 돌연변이가 존재하더라도 주류전략을 선택

하는 것이 진화안정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청렴전략이라는 돌연변이 전략을 취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궁극적으로 현재의 부패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되어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위 2인 게임을 3인 게임으로 확장하여도 <부록 1>에서 제시되듯 부패전략의 안정성은 여전히 지지된다.

이상의 2인 및 3인 게임 상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부패가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소수의 청렴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부패라는 내쉬균형점에 고착(lock-in)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게임이론의 관점에서는 부패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유도할 수 있다.

연구가설 3: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시민들이 인식하면 시민들은 부패의향이 높다.

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들을 종합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연구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은 부패의 만연도 인식과 심각성 인식, 관행수용도가 부패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해당 관행(금품·향응, 알선·청탁, 차지제공)에 대한 만연도 인식과 심각성 인식, 관행수용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만연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특정 부패유형에 대한 부패 만연도와 심각성 인식과 사회 전반적인 부패의 만연도와 심각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부패인식도조사에서는 사회 전체의 일반 인식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부패문화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묻게 되면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특정 부패에 대한 인식이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의향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을 개별 부패 유형별 인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 연구 모형



한편 위 연구모형에서는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기대이익,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기대이익은 부패행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써 부패의향에 영향을 준다. 클릿가드(Klitgaard, 1988)가 설명한 대리인(agent)의 의사결정트리(decision-making tree)는 부패행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부패행위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부패하지 않음에서 오는 효용과 비교하여 기대효용이 큰 경우 부패를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공영호(2002)는 관료부패의 원인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초과이윤이나 특혜를 얻기 위한 지대추구행위로 설명하며, 뇌물제공자가 추구하는 이익을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대이익을 금품제공으로의 영향력이라는 변수로 확대하여 해석하면 금품제공의 영향을 인식할수록 실제 금품제공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진중순·서성아,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대이익이 부패의향에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일수록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중순·서성아, 2006). 이는 부패현상에 관하여 성별(gender)을 영향요인으로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인맥을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Azfar, Knack and Lee, 1999; Bryan W. Husted, 1999; Swamy, Knack, Young and Azfar, 2000; 진중순·서성아, 2006).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향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부패행위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길곤·조수연, 2012).

연령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해 관대하다는 주장은 연령 간·세대 간 나타나는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유래된다. 한국의 경우 부패의 원인이 가족주의, 연고주의와 유교문화 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전통문화에 좀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김용철·윤종철, 2004; 조은경·이정주, 2006; 진중순·서성아, 2007). 또한,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기성세대에 비해 개혁적인 성향을 띠므로 공직 사회 부패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고,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직 사회 부패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수용적일 것이라는 가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고길곤·조수연, 2012) 젊은 세대가 오히려 부패에 관대하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부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실증적 연구도 제기되었다. 부패제공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업자에 비해 이해관계가 보다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견해(진중순·서성아, 2006), 소득이 낮을수록 현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는 연구결과(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가 존재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박광국, 1995)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높였다.

### III. 부패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조달청에서 주최하는 “201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하는 153개의 공공기관 납품 업체 관계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부패실태 추이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의 「공무원 인식 조사」와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 국민권의 위원회의 「부패인식·경험 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공직부패의 심각성, 만연도, 관행수용도, 기대이익, 부패의향 및 인구통계학 변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 사회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유형인 금품·향응 제공, 알선·청탁, 촌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박람회 기간인 2012년 4월 19일~21일 중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290부 중 유효표본 수 267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일부 설문문항에서는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이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sup>5)</sup>을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부패행위와 같이 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설문조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선택할 편향(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설문결과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한 국민권의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는 1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3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권의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과 대상의 차이를 고려

5) 결측/무응답을 가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결측값을 적절한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완전한 자료를 만드는 대체법(imputation)을 활용하는데,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평균 대체법(mean imputation), 평균 대체법에서 추정량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문제를 보완하여 어떤 적절한 확률값을 부여 한 후 대체하는 단순 확률 대체법(Single Stochastic Imputation) 등이 있다. 그 중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은 단순 대체법을 한 번 하지 않고 m번의 대체를 통해 m개의 가상적 완전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설문결과가 상대적으로 부패 경험에 대한 응답의 관대화 경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여 단순 전화설문보다 진실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 <표 3>은 본 연구에서 관행화된 부패의 유형과 부패의향, 그리고 각종 독립변수를 설문을 이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한 결과이다. 관행화된 부패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목적이 구체화 되지 않은 1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10만 원 상당의 촌지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해관계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알선·청탁행위를 중심으로 관행화된 부패 유형을 선정하였다. 위 관행 유형에서 금품/향응 제공행위와 알선·청탁행위는 명백한 부패행위에 가까운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일반화된 식사 접대로 모호하게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금전이 개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조작적 정의이다.

한편 복수의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 alpha)을 이용한 내적 일관성과 요인분석을 통한 단일 차원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와 측정 문항

		설문 문항		
		금품·향응 [사례1]	알선·청탁 [사례2]	촌지 [사례3]
변수		“요식업자 A씨는 영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의 담당 부서인 위생과에 정기적으로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식사 접대를 해오고 있다.”	“건설업자 B씨는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구청의 과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입찰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식사를 접대한다.”	“학부모 C는 중학생 아들의 담임선생님에게 명절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촌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독립 변수	만연도인식 <sup>6)</sup>	Q.선생님께서서는 보기의 행동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성인식	Q.선생님께서서는 보기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수용도	업무처리상 관행, 도덕적 비용/ 단순한 인사치레/법적 제재를 가할 부패행동은 아님/정성의 표시이자 한국의 문화		
종속 변수	부패의향	Q.선생님께서서 요식업자 A씨의 상황인 경우, 보기1과 같은 행동을 할 의향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제 변수	기대이익	원만한 관계유지 신속한 업무처리 계약수주시 유리	인맥동원이 입찰 성사 및 경쟁서 유리 지인과의 상호 이익	교사와 친밀한 관계 부당한 대우 방지 특별히 신경써줄 것
	경험	Q. 보기와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인구통계학적 변수	Q.연령 Q.성별 Q.가구당 월평균 소득		

6) 개별 관행별 부패만연도와 심각성 인식 이외에도 사회 전문의 부패만연도와 심각성 인식을 측정하였다.

## 2. 분석 결과

먼저 기술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부패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6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4.46점으로 응답할 정도로 공공기관 납품업체들은 부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패 만연도는 4.07점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위 차이는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만연도가 심각성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는 것은 실제 부패의 빈도 자체보다는 부패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납품업자들은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의 심각성과 만연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패심각성	266	4.46	1.10	1	6
부패만연도	266	4.07	1.13	1	6

주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납품업체는 1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할 의향이냐(3.14), 알선/청탁을 할 의향(3.49)은 높으나 촌지를 제공할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4). 이것은 응답자들이 대부분 남자이고(76%), 여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경험이 있어 촌지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부패행위가 알선/청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응답자들은 금품/향응, 알선/청탁, 촌지 제공의 의향은 낮으면서도 사회에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관행화된 부패가 사회에 일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공공기관 납품업자들의 부패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은 것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관행수용도가 낮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알선/청탁의 경우 관행수용도(3.53)가 촌지의 관행수용도(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선/청탁이 촌지와 비교하였을 때 더 심각한 부패임에도 촌지보다 관행수용

이때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공무원)의 ‘부패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가 높은 것은 상식과 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알선/청탁에서는 구체적으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선배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청탁을 할지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전이 명확하게 제시된 금품/향응이나 촌지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이런 행위를 부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금품이 제시되는 대신 식사를 대접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댄 애리얼리(Dan Ariely, 2012) 등 여러 행동경제학자가 주장하듯이 금전이 개입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비금전적 부정행위에서는 관대한 인간의 심리적 태도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부패의 경험을 살펴보면 1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37%에 달하고 있으며 알선/청탁의 경우도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청탁을 하는 것이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기대이익의 부분이다. 만일 자신이 관행화된 부패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금품/향응(4.3) 및 알선/청탁(4.51)은 기대이익이 높을 것으로 납품업자들은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납품업자들이 직접적인 부패의 편익 크기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자료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금품향응	의향	237	3.14	1.46	1	6
	부패만연도	267	4.13	1.12	1	6
	부패심각도	267	4.46	1.16	1	6
	경험	241	1.46	0.66	1	3
	관행수용도	263	2.89	1.25	1	6
	기대이익	262	4.3	1.19	1	6
알선/청탁	의향	231	3.49	1.52	1	6
	부패만연도	266	4.5	1.09	1	6
	부패심각도	263	4.19	1.09	1	6
	경험	234	1.51	0.66	1	3
	관행수용도	261	3.53	1.19	1	6
	기대이익	262	4.51	1.15	1	6
촌지	의향	248	2.74	1.49	1	6
	부패만연도	265	4.23	1.18	1	6
	부패심각도	265	4.52	1.14	1	6
	경험	220	1.2	0.4	1	2
	관행수용도	261	2.86	1.34	1	6
	기대이익	261	3.62	1.47	1	6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계수를 해석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으나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분산 가정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부패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고 생각할수록 금품/향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거나, 알선/청탁을 할 의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세 유형의 관행화된 부패를 저지를 의향은 낮아지고 있다. 즉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3은 다른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부패경험은 세 종류의 관행화된 부패에서 부패의향과 모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대이익의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금품/향응 제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다시 동일한 부패행위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부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행수용도는 충지를 제공하려는 의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충지가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충지를 제공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대이익은 합리적 기대효용 모형에서 가정하듯이 관행화된 부패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부패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납품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분석결과를 전체 여성과 남성의 부패의향의 차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나이와 업종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사람일 경우 금품/향응을 제공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부패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별 관행유형별 부패만연도와 심각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금품/향응 의향	알선/청탁 의향	충지 의향
부패만연도	0.21(0.12*)	0.21(0.12*)	0.13(0.09)
부패심각도	-0.18(0.11*)	-0.25(0.11**)	-0.28(0.09***)
경험	0.55(0.2***)	0.39(0.18**)	0.73(0.26***)
관행수용도	0.01(0.1)	0.14(0.12)	0.18(0.09**)
기대이익	0.3(0.11***)	0.38(0.12***)	0.29(0.07***)
나이	-0.06(0.13)	-0.04(0.12)	-0.1(0.1)
소득	-0.14(0.07**)	-0.06(0.06)	0.03(0.06)
남성	0.43(0.28)	0.27(0.27)	0.1(0.24)
업종	Suppressed		
R-Squared	0.26	0.42	0.38

주: ( )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01, \*\* p<0.05, \* p<0.1

위 분석결과는 각 관행화된 부패 유형별로 부패만연도와 부패심각도를 측정하여 부패의 향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특정 유형의 관행화된 부패의 만연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부패의 만연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별 관행화된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된다. 만일 사회의 일반적인 부패만연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면 개별 관행화된 부패 유형에 대한 부패만연도와 심각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운동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의 부패만연도와 심각도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패만연도와 부패심각도의 인식은 부패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관행화된 부패행위에 대한 의향은 사회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해당 관행화된 부패의 심각도나 만연도에 대한 인식에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부패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전반의 부패만연도와 심각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금품/향응 의향	알선/청탁 의향	촌지 의향
부패만연도	-0.08(0.14)	-0.02(0.14)	-0.09(0.12)
부패심각도	-0.2(0.14)	0.16(0.13)	-0.13(0.12)
경험	0.55(0.2***)	0.51(0.17***)	0.81(0.27***)
관행수용도	0.11(0.1)	0.2(0.11*)	0.3(0.08***)
기대이익	0.33(0.11***)	0.5(0.12***)	0.26(0.08***)
나이	-0.02(0.13)	-0.09(0.12)	-0.11(0.11)
소득	-0.13(0.07*)	-0.05(0.06)	0.06(0.06)
남성	0.25(0.27)	0.22(0.27)	0.01(0.25)
업종	Suppressed		
R-Squared	0.25	0.41	0.35

( )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일부 설문항목에 응답하지 않아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측치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대 기대(Expectation-Maximization)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 대체(multiple imputation) 자료를 생성하여 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위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공기관 납품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부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으로 합리적 기대효용모형과 진화안정전략게임 모형을 통해 부패의향은 개인의 기대이익뿐 아니라 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패에 대한 심리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패를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용을 줄여 부패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부패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행화된 부패(petty corruption)이다. 관행화된 부패는 이미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확률이나 처벌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 기존의 부패연구가 부패로 인한 비용을 늘리고 편익을 줄이기 위한 부패근절 방안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부패한 사회에서 개인이 취하게 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과 도덕적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부패의향을 연구하였다.

실증분석결과와 사회에서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되는 개체군에서는 부패를 선택하는 것이 진화안정전략이 된다는 이론적 결과가 지지되었다. 즉 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인식이 부패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부패가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부패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부패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패의 심각성을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주관적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 부패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들은 촌지나 금품/향응 제공보다 알선/청탁과 같은 행위를 더 관행으로 받아들인다는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촌지나 금품/향응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이라는 금품’을 질문에 포함시킨 반면 알선/청탁의 경우는 금품의 크기에 대한 제시 없이 선·후배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물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은 금전이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비금전적인 행위 예컨대,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비금전적인 부정행위에 관대하다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청탁이라는 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가 금전을 매개로 행해지던, 식사, 선물, 혹은 다른 형태의 비금전적인 것을 매개로 행해지던, 이를 다르게 다룰 이유가 크지 않다. 특히 현실에서의 많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인 행위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금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저녁 식사를 명분으로 친분을 쌓고 이후 알선/청탁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한국남부발전, 2011). 따라서 식사를 제공받

는 행위와 같은 비금전적 부패행위에 관한 명시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행화된 부패를 추상화시켜 단순히 문화의 한 측면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교문화나, 군사문화 혹은 동양의 부패문화가 부패의 원인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 전반의 부패만연도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 부패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패만연도 및 심각도가 부패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특정 관행화된 부패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패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인식은 개선하고 부패의 심각성은 제고하는 노력이 법·제도적 대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관행화된 부패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는 분석결과는 부패인식도 조사가 앞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전반의 부패만연도와 심각도는 종합적인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특정 사건이나 정치상황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편향된 사회적 관념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높게 혹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패지수나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의 부패인식도를 실제 부패수준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부패수준이 과대 혹은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부패만연도와 부패심각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패만연도는 부패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 부패만연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패의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패심각도는 시민이 부패행위에 대한 느끼는 도덕적 엄격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패의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패인식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패인식과 수준을 측정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비용을 부패의 심각성과 관행수용도라는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관행수용도라는 변수가 도덕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부패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도덕적 비용의 다차원성을 고려한다면 도덕적 비용의 내용과 측정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설문조사를 특정 시점과 공간, 업종에 국한하여 진행하였으며,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편의추출법을 택한 점은 분석 결과를 전체 국민의 인식과 태도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부패심각성 인식 측정에서 사용된 6점 척도에서 측정된 ‘심각’의 수준별 의미의 실질적인 의미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부패방지위원회. (2003). 「부패방지백서」. 삼일기획.
-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한국남부발전. (2011).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피그마리온.
- 한국행정연구원. (2009).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고길곤·조수연. (2012).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6-3. 213-239.
- 김왕수. (1998). 한국사회의 부패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4. 1-38.
- 김용철·정재동. (2006). 부패에 관한 시민의식과 통제전략의 모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3. 255-278.
- 김준석·조진만 등. (2011).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343-371.
- 박광국. (1995). 관료부패현상에 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연구. 4-3. 137-158.
- 백완기·전수일 등. (2000). 공직부패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34-2. 79-100.
- 변지은·이수정 등. (1997).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보. 3-1. 107-122.
- 사공영호. (2002).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4. 75-98.
- 손승영. (1998). 한국사회 부패의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발전연구. 4. 39-58.
- 윤인진·조대엽. (2001).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와 시민성: 서울시 소재 8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4. 83-118.
- 윤태범. (1999). 관료부패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3. 75-90.
- 윤태범. (2000).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33-4. 129-151.
- 이영균. (2003). 부패에 관한 의견조사의 분석: 성남시 시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3-2. 75-94.
- 전수일. (1984). 관료부패연구: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8-1. 143-163.
- 조은경·이정주. (2006).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491-509.
- 진종순·서성아. (2006).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 45-3. 233-257.
- Anand, S. Knack, S. Lee, Y. and Azfar, O. (2000). *Gender and Corruption*. IRIS Center.
- Ariely, D. (2012).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New York: Harper.
- Dawkins, R. (2012). *The Selfish Gene*. Paperback.
- Heidenheimer, A. J., Johnston, M., & Levine, V. (1989).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New

-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Husted, B. W.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algrave Macmillan. 30-2. 339-359.
- Kelling, G. L., Coles, C. M. (1996).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New York: Free Press.
- Kelling, G. L., Wilson, J. Q. (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 Klitgaard, R.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mbsdorff, J. G. (2006).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What do we know from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n S. Rose-Ackerman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pp. 3-51). Cheltenham, UK ;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Rose-Ackerman, S.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J. M. (1982). *Evolution and the theory of g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부록 1> 3인 게임에서의 진화안정전략 증명

세 명의 대표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게임에서 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임에서의 보수의 합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보수의 크기는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앞의 2인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C와 I 두 가지 전략만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자. 다른 두 시민들의 전략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시민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고 하자.

$$u(I, I, I) = 1/3 \leftarrow \text{모든 사람들이 동일 전략을 취하므로 동일한 보수를 갖게 됨}$$

$$u(C, C, C) = \frac{1-d}{3} \leftarrow \text{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d)으로 1/3 보다 작은 보수를 갖게 됨}$$

$$u(C, I, C) = a \leftarrow a \text{는 } 1/3 \text{보다 작은 임의의 상수,}$$

$$u(I, C, C) = z \leftarrow z \text{는 } a \text{ 보다 작은 임의의 상수}^8)$$

$$u(I, C, I) = a + \delta, \quad u(C, I, I) = 1 - 2a - 2\delta$$

만일 한 사회에서 부패가 주류적인 전략이라고 할 때 부패가 진화 안정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돌연변이 전략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C를 선택한 경우의 보수가 I를 선택한 경우의 보수보다 커야 된다.

$$C^* \text{ 선택시} \rightarrow (1-\epsilon)^2 u(C, C, C) + 2\epsilon(1-\epsilon)u(C, I, C) + \epsilon^2 u(C, I, I)$$

$$I \text{ 선택시} \rightarrow (1-\epsilon)^2 u(I, C, C) + 2\epsilon(1-\epsilon)u(I, I, C) + \epsilon^2 u(I, I, I)$$

위 식에 보수값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u(C^*) - u(I) = (1-\epsilon)^2 \left[ \frac{1-d}{3} - z \right] - 2\delta(1-\epsilon)\epsilon + \epsilon(1-2a-2\delta-1/3) \quad (3)$$

여기서  $\epsilon$  이 상당히 작은 값이므로 위 등식의 부호는  $\left[ \frac{1-d}{3} - z \right]$ 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때

$\frac{1-d}{3}$  은  $u(C, C, C)$ 일 때 시민1의 기대보수이고,  $z$ 은  $u(I, C, C)$ 일 때 시민1의 기대보수인데,  $1/3 > a > z$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u(C, C, C)$ 가  $u(I, C, C)$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부패가 주류적인 전략일 때 부패전략은 진화안정전략(ESS)이 된다.

8) 사회적으로는  $u(C, C, I) + u(C, I, C) + u(I, C, C) + z = 1$  이기 때문에  $z$ 는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